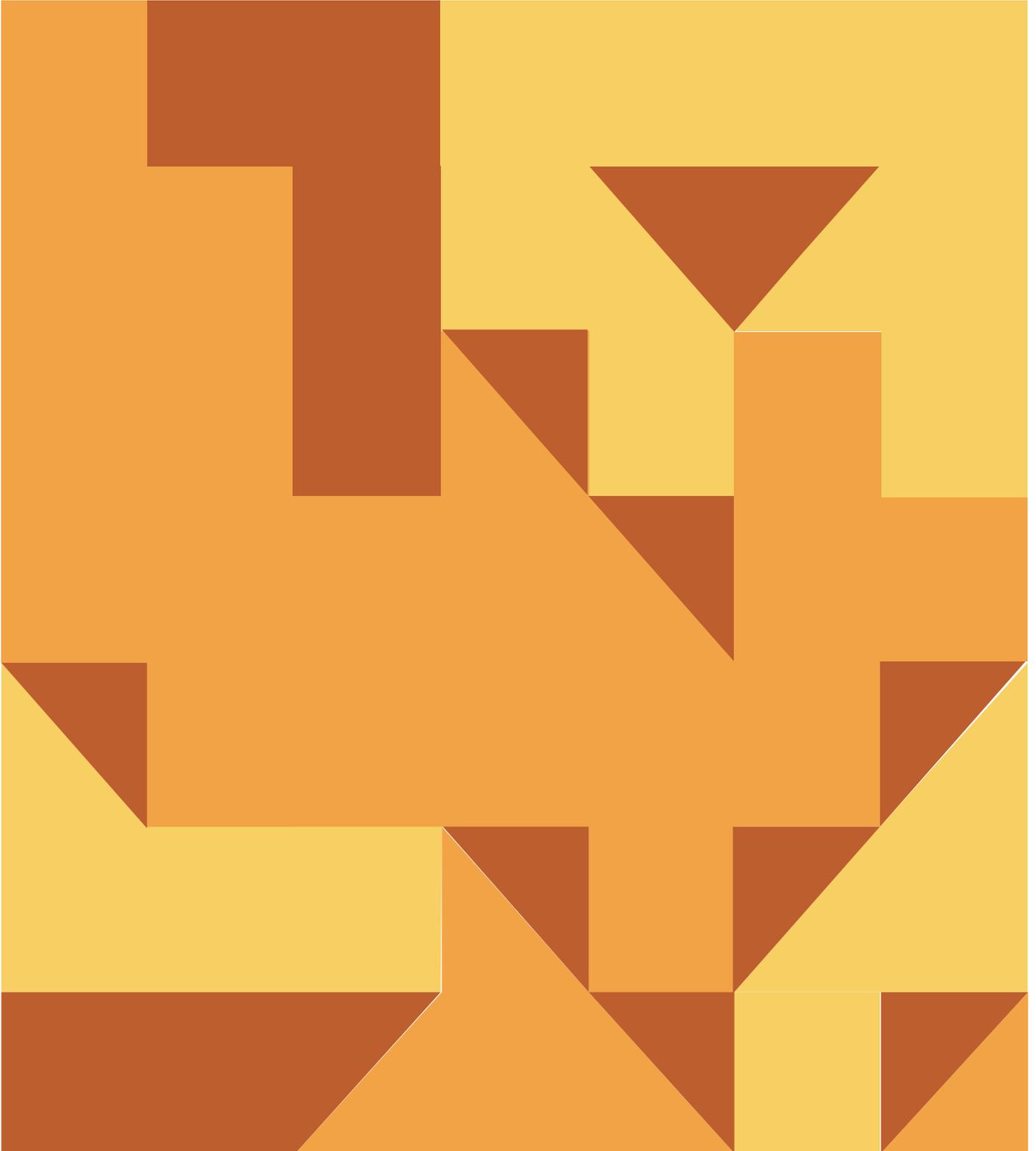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임팩트온의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는 매월 분야별 ESG 트렌드를 주제별로 정리해 제공하는 연중 기획 시리즈입니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 1. ESG 정책

### Key Takeaways

- 전 세계를 아우르는 2월의 ESG 정책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공시다. 유럽과 미국은 공시안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약진이 이뤄지고 있다.
- 주요 ESG 정책은 EU에서 발표되므로 유럽의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발표됐지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여전히 불분명함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 미국은 유럽과 달리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월에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 2월 글로벌 ESG 정책 키워드는 '공시'

2월 한 달간, 전 세계의 ESG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의무공시**였다.

유럽과 미국은 공시 기준을 완화했다. **EU는 산업별 공시기준 채택일을 2년 연기**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6월부터 환경 영향이 큰 8개 산업에 대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시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6년 6월로 유예됐다.

이는 일반 공시를 먼저 수행하여 추이를 보고 더 구체적인 산업별 기준을 그 위에 얹어 단계적으로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ESG에 대한 일반 공시를 시작한다. 기업들은 회계연도 2024년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자 검증 후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기후공시법 초안에 반영됐던 **스코프3 배출량 보고 의무를 삭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관청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코프3 보고 삭제 건을 포함해 기후 영향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에 대한 투표를 **3월 6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2년 3월 초안이 나온 후 기업 반발이 커서 2년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SEC는 ESG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와 글로벌 환경에서 공시법이 생겨나는 추세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도입 일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듯 다가오는 4월에 공시법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반발이 큰 스코프3 공시를 떼어놓고 일단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EU는 ESG 공시에 있어서 일반 부문을 먼저 실행하고, 산업별 공시에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언스플래시

유럽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일 ESG공시 지침을 2026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시 지침은 스코프3 배출량 보고를 포함하여 야심 찬 기준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중국식 공시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더욱 주목받았다. 중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사국으로 해당 표준을 바탕으로 공시법을 설계했으나,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ISSB가 요구하는 단일 중요성이 아닌 이중 중요성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 2021년 6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기후 부문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기후 공시를 ESG 주제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무기관인 일본 금융청은 3월 중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의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확정했으며, [공시 기업에 지원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3~4월 중 공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도입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법 도입 후 3년간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정책은 유럽서 나와...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금 마련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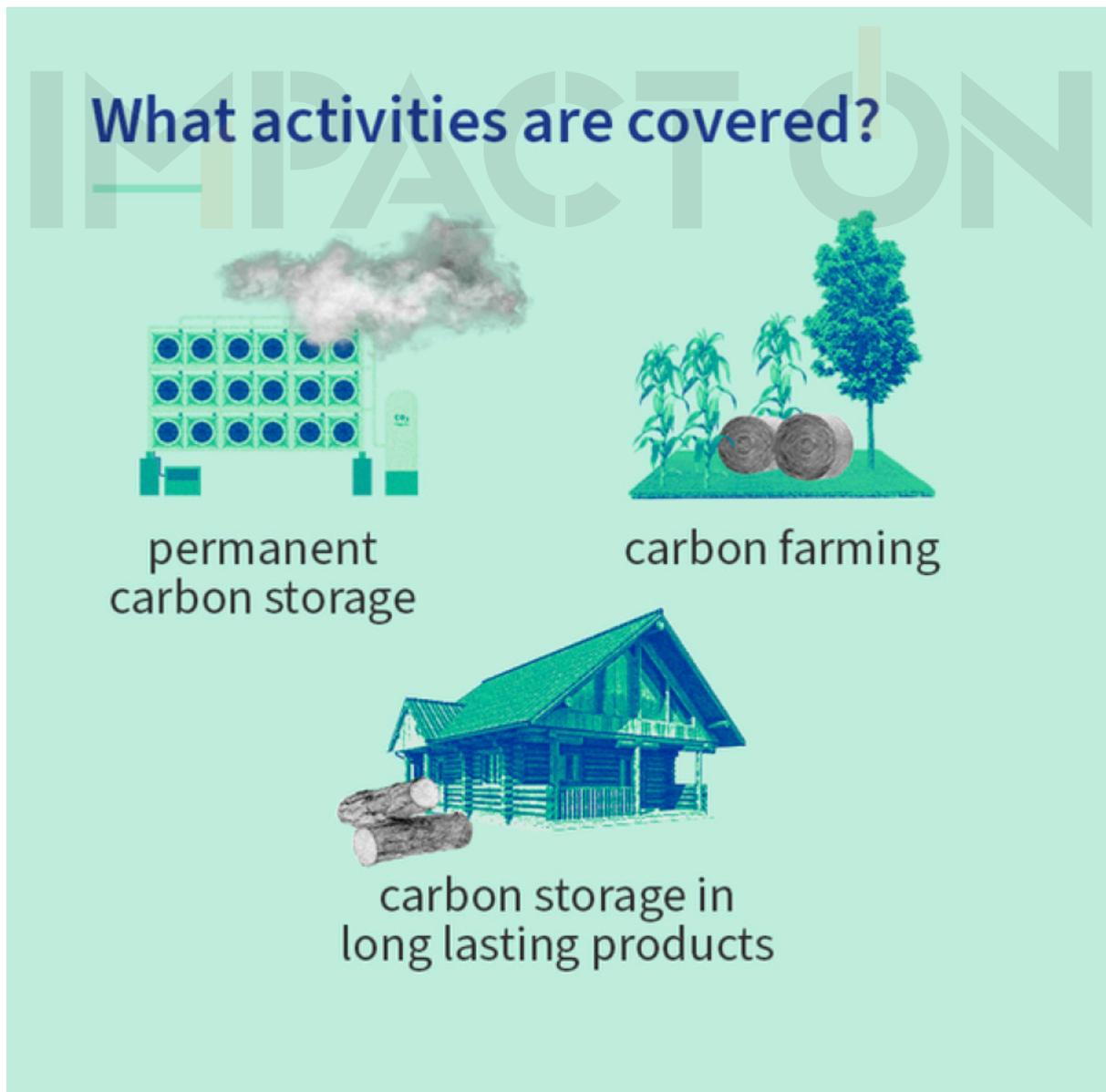
2월에도 주요 정책 소식은 주로 유럽에서 들려왔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합의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는 주요 정책에는 ▲ESG 평가기관 규제법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대기질 기준 강화규칙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이 있다.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과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한부여 지침은 그린워싱 방지 정책이다. 이 규정은 탄소 상쇄에 대한 불공정한 주장을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친환경 주장 외에도 전반적인 소비활동에 있어서 정보 제공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이 그린워싱 방지법은 의회에서 승인한 [환경범죄법](#)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처벌법이다.

ESG 평가기관 규제법은 ESG 등급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집행위가 2023년 6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고 유럽의회는 2023년 12월 이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ESG 평가기관이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ESG 평가등급 및 벤치마크 서비스 판매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연간 순 거래액의 최대 10%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는 영구탄소제거, 탄소농업, 지속가능한 제품의 탄소 저장 등이 포함된다. / 유럽의회

탄소제거 프레임워크는 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CDR)를 EU의 기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1월 집행위가 처음 제안한 정책이다. 탄소 제거는 탄소 감축, 탄소 상쇄와 다르게 기술 및 자연환경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직접공기포집(DAC)이나 자연을 이용한 천연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탄소제거에 대한 그린워싱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위해 제시됐다. 2024년 4월로 예상되는 최종 투표 이전에 승인될 경우 변호사의 수정을 거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EU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면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가 발효된다.

탄소제거 프레임워크와 짝을 이룰 법안은 27일 의회가 채택한 **자연 복원법**이다. 법안에 따라 회원국은 2030년까지 파괴된 서식지의 최소 2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 갯벌 등의 이탄지 조성 등을 통해 자연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일변도의 EU도 **공급망 실사법은 통과시키지 못했다**. EU 이사회의 순환의장국을 맡은 벨기에가 이사회 상주대표회의에서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최종 승인 표결을 연기한다고 14일(현지 시각) 밝혔다.

CSDDD는 지난해 12월에 EU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3자 간 협상이 타결되어 사실상 입법이 확실시됐었으나,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에서 제동이 걸렸다. 회원국 중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하고, 프랑스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 규제안을 제시하면서 표결이 미뤄졌고 다음 투표일은 결정되지 않았다. 반ESG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들이 6월에 예정된 유럽의 회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CSDDD가 사실상 좌초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U가 발표한 넷제로 산업법/EU이사회

EU가 내놓은 지원책은 여전히 약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EU 넷제로 산업법**이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함께 3자 협상에서 잠정 타결됐다. 넷제로 산업법은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과 같은 부문을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EU 역내에서 해당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증대함을 목표로 한다.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은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유럽은 미국 IRA의 3690억달러(약 490조원) 녹색 보조금만큼의 재원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NZIA는 IRA처럼 새로운 보조금을 마련한 게 아닌 기존의 코로나 회복 기금 등을 조정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냐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집행위는 같은 날 204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함께 발표했다. 넷제로 산업법에 따른 지원은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따라 이행된다. 목표는 204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는 것이다. 집행위는 에너지 부문이 2040년 완전히 탈탄소화되고, 운송 배출량은 2040년까지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감축 방식으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탄소배출권 감축시장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페어링 될 정책으로는 집행위가 제안한 CCUS 산업규제 간소화 방안과 [탄소시장 개설 태스크포스](#)가 있다. EU는 CCUS 사업과 탄소배출권 사업을 확대하여 넷제로 산업법으로 제공할 자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 미국, 강력한 지원 정책 유지...2월 키워드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

미국은 유럽의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드릴 정도로 거대한 IRA 지원금을 통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 IRA는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지원 분야도 넓으나, 2월에는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전기차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미국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상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DOE)는 지난 8일(현지 시각) 풍력 에너지 기술 사무소(WETO)를 설립하여 연구기관에 총 1190만달러(약 158억원)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접근법 중 중요한 특징은 이 문제를 국방의 문제와 결부 지었다는 점이다. 막대한 예산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DOD\)](#)는 [미 조달청\(GSA\)](#)과 연계하여 대서양 및 중서부 14개 주에서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유럽연합이 중요한 탈탄소 방법으로 제시한 [탄소제거\(CDR\)](#)에 대해서도 미국은 1억달러(약 1338억원)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4억4400만 달러\(약 5777억원\)](#)를 지출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Administration Pri

NOVEMBER 14, 2023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Fif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and Announces More Than \$6 Billion to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Across the Country

Administration Pri  
BRIEFING ROOM STATEMENTS AND RELEASES

*Fif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NCA5) shows decline in U.S. greenhouse gas emissions even as population and GDP have grown*

Since Day One, President Biden has delivered on the most ambitious climate agenda in history – signing into law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action ever, including more than \$50 billion in climate resilience, taking bold action to reduce climate pollution across every sector of the economy, protecting more than 21 million acres of public lands and waters, and restoring the vital role of science in guid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As a result of the President’s leadership and economic plan, Bidenomics, clean energy jobs are on rise across the country, companies have announced

미국 백악관의 기후회복력에 대한 60억 달러 이상 지원 발표/백악관 홈페이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위축된 전기차 부문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사격도 약속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 SK 실트론(Siltron) C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출력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5억4400만 달러(약 7248억원)를 대출받을 예정이다. 이 부품은 인버터와 전기 배전 시스템을 포함한 중요한 EV의 구동에 필요하다고 실트론은 밝혔다. 아울러 실트론은 성명서에서 공장 확장으로 건설 및 생산 부문에서 각각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기후 정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까지 청정 교통 인프라에 19억 달러\(2조535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는 2045년까지 운송 부문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주의 목표에 따라 전기차 충전과 수소연료 보급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여 무배출 차량(ZEV)과 운송 인프라 확장에 활용된다.

### Editor's Comment

미국과 유럽은 지원과 규제 정책에 대한 무게추를 다르게 두고 있다. 규제가 강한 유럽과 큰 지원을 하는 미국을 비교할 때,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하는 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지속가능성을 정의하는 기준들을 담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뒷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두 곳에서의 ESG 정책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간 자본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업과 금융의 입김을 받아 정책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강력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대선 출마자격 유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수가 되어 11월 대선 이후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ESG 정책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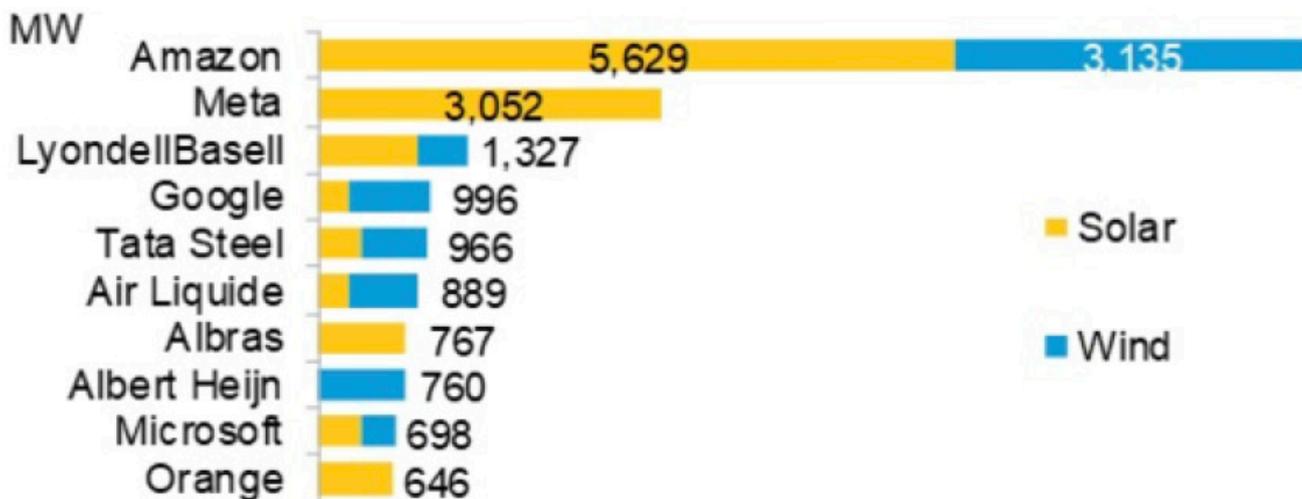
## 2. 에너지 & 산업

### Key Takeaways

- 고금리, 공급망 이슈로 인해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이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량 증가, 대규모 계약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에 장기적 전망은 밝다.
- EU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SAF 공급에 대한 산업계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국내 정유업계도 후발주자로 추격하는 양상이다.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세계적인 기업 인력감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금리, 경기침체우려, 실적약화, AI 및 시설 자동화로 인한 인력대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시장 수요 및 투자는 활발, 하지만 사업의 수익성이 문제

최근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 추적 플랫폼 레벨텐(LevelTen)은 “4분기 친환경 전력에 대한 유럽 전력구매계약(PPA) 가격이 2% 하락했으며, 지금이 재생에너지 구매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시장분석의견을 밝혔다.



Source: BloombergNEF Note: Chart is for offsite, publicly disclosed deals only and may be subject to change as more information is made publicly available. Capacity is in GW DC.

2023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순위/블룸버그NEF

이들은 산업계의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지속된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전통 에너지원에 비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현재의 낮은 재생에너지 가격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가장 적기라고 평가했다.

## ① 아마존과 구글, PPA에서 적극적 행보

실제, PPA시장의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과 구글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의 경우,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서 약 700MW 규모의 PPA계약을 새롭게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에네코(Eneco)와의 478MW규모 해상풍력 계약, 이탈리아 에너지회사 ERG와의 47MW 규모 육상 풍력 계약, 폴란드 골든피크캐피탈(GoldenPeaks Capital)과의 106MW규모 태양광 계약이 포함된다.

[아마존은 2023년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4년 연속 재생 에너지 최대 기업 구매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다. 2024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월 30일 아마존은 엔지(Engie)와 473MW 규모의 해상풍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

## ② 신규발전 58% 태양광 예정, 풍력도 15.5기가 승인 받을 전망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 정보청(EI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신규 발전량의 약 58%\(36.4GW\)는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공급망 이슈 및 인허가 문제로 불과 18.4GW의 태양광이 패널이 설치되었는데, 올해 설치량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美 에너지부(DOE)가 풍력 에너지 기술 사무소(WETO)를 설립하여 연구기관에 총 1190만달러(약 158억원)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미국 해상풍력 싱크탱크인 오션틱 네트워크(Oceantec Network)가 20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4년 미국 해상 풍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5.5GW(기가와트) 용량에 달하는 프로젝트가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오션틱 네트워크는 승인되는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손해가 난 프로젝트의 60%를 상쇄할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 ③ 2023년 대규모 적자 기록, 하반기 실적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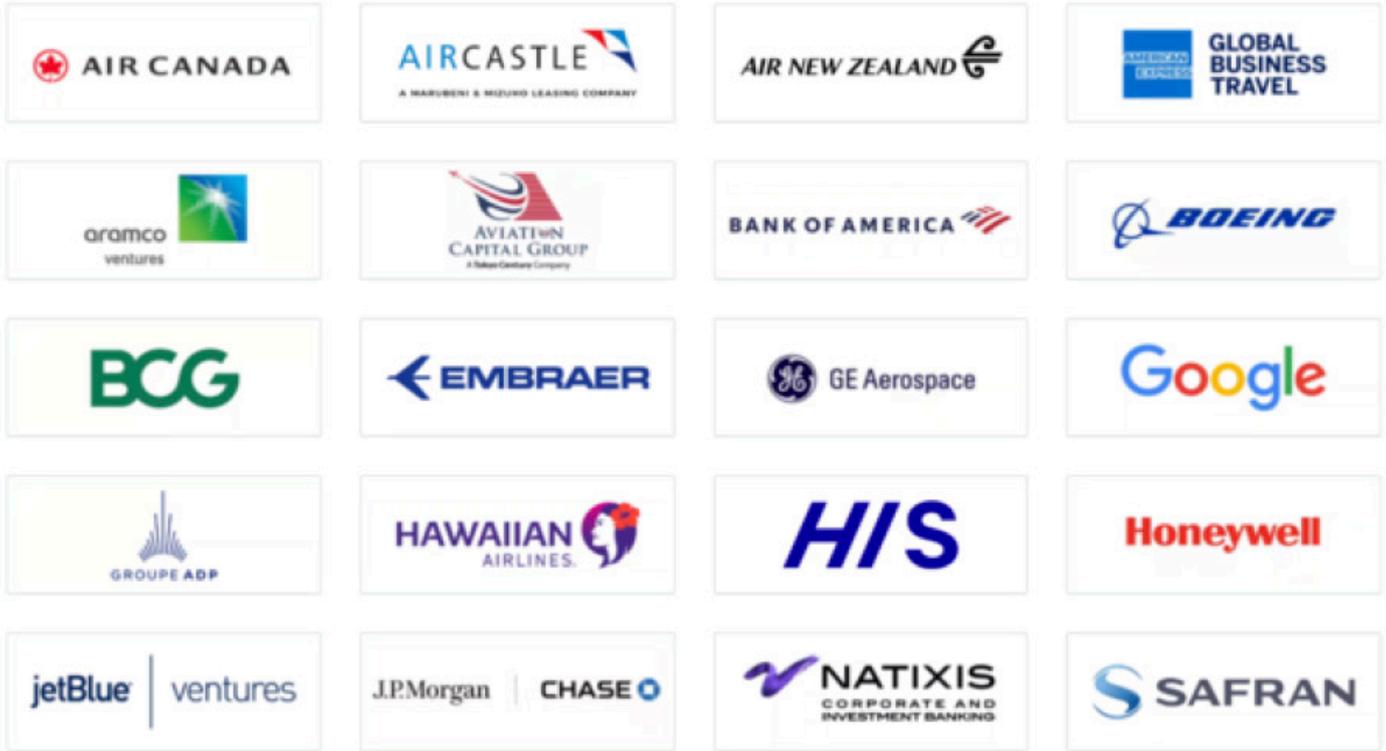
하지만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화솔루션, 선파워, 솔라엠티, 오스테드 등의 주요 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최근 발표한 23년도 4분기 실적발표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일례로 지난 22일, 한화솔루션은 2023년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34.6% 줄고 155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실적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미국IRA법안의 보조금 예측 실패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에 따르면, 미국 재생에너지 사업비의 80%는 부채로 충당](#)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 취약하다. 또한 예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운임비가 약1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상황도 좋지않다. 한화솔루션, 솔라엠티 등은 재고과잉 및 판가하락 등으로 상반기에도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정상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Rystad Energy)는 “올해부터 공급망 및 원자재 이슈가 완화될 것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뒷받침 되고 있기에 장기적 전망이 밝다”라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SAF 도입 움직임, 국내 정유업계는 후발주자로 추격

Sustainable Flight Fund partners



유나이티드 항공의 SAF벤처펀드 주요 파트너/유나이티드 항공

④ SAF 벤처펀드, 유나이티드 항공, 구글 등 2억달러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지난 15일, 유나이티드 항공이 주도하는 SAF 벤처 펀드는 다수의 신규 파트너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글, 나틱시스, 에어 뉴질랜드 등 주요 항공사, 투자은행, 항공운송 서비스 사용 기업 등이 포함되어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 따르면, 현재 펀드의 규모는 약 2억달러(266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일, 미국의 SAF전문기업 란자제트(LanzaJet)와 호주의 SAF전문기업 제트제로 오스트레일리아(Jet Zero Australia)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울리시스(Project Ulysses)’ 사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북부 퀸즈랜드 지역에 대규모 SAF공장을 신설해 연간 약 1억 리터의 SAF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는 프랑스의 에너지업체 토탈에너지스와 에어버스는 SAF공급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토탈에너지스는 에어버스의 유럽 내 SAF수요의 약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100% 지속가능한 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⑤ 주목받는 SAF 이니셔티브들

유럽과 북미 기업의 경우 이전부터 SAF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SAF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에서 선제적 위치를 확보한 바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SAF이니셔티브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족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국제연합(Global Coalition for Sustainable Aviation), 환경보호기금(EDF)의 주도로 창립된 지속가능한 항공 구매자 연합(Sustainable Aviation Buyers Alliance) 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는 글로벌 법안 통과로 인한 산업 트렌드를 인지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한국석유협회 측은 “앞서 나가는 제도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9일, 에쓰오일(S-Oil)이 국내 최초로 정유 공정에 바이오 연료를 투입한바 있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이노베이션이 SAF 생산을 목표로 생산설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IT 업계를 넘어 확산되는 글로벌 구조조정 움직임**

산업	기업명	감원 규모
IT	시스코 시스템즈	5%(약 4250명)
IT	마이크로소프트	게임부문 8% (약 1900명)
IT	이베이	10% (약 1000명)
금융	씨티그룹	2만명
금융	도이치 은행	3500명
금융	바클레이즈 은행	5000명
철강	타타 스틸	2800명
철강	티센 크루프	2370명
운송/항공	UPS	12000명
운송/항공	아메리칸 항공	650명
자동차	콘티넨탈 AG	7150명
자동차	포드	2700명
소비재	밀레(Miele)	2700명
소비재	에스티로더	3100명

2024년 1~2월 감원을 발표한 주요 글로벌 기업 목록 ©임팩트온.

글로벌 구조조정 움직임이 IT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월에만 미디어, 철강, 제약 등 산업 분야 다방면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산업분야에서 실적 약화 및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고금리,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AI 및 공장 자동화 등으로 인해 인력 대체가 가능해진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 ⑥ 2023년 美 72만명 해고...2024년 가속화

미국의 재취업 전문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Challenger, Grey & Christmas)에 따르면, [2023년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미국의 노동자는 약 72만명으로 2022년 대비 약 98% 가량 폭증했으며, 2024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교적 해고가 쉬운 미국에서는 산업 전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발표되고 있으며, 노동계의 영향력이 강한 유럽에서는 직원 감축을 두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례로 타타스틸이 영국 용광로 폐쇄를 이유로 약 2800여명의 해고를 발표하자, 지난 17일 영국에서 두번 째로 큰 124만명 규모 노동자조합 유나이티드 더 유니온(Unite the Unions)은 내부 투표를 통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 Editor's Comment

산업 내 ESG 관련 리스크와 비즈니스 기회가 뚜렷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공급망 이슈, 고금리 등 ESG 관련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및 SAF 등에서 친환경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 점점 이니셔티브나 규제 지렛대를 통해 관련된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경우, 대응이 느린 국내 산업군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친환경 산업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강해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IMPACT ON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 3. 전기차 산업

### Key Takeaways

- 전기차 시장의 주요 이슈는 중국 기업의 독주를 어떻게 막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지다. 특히, 미국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방어를 위해 관세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어 대미수출 관세가 없는 멕시코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우회 수출로를 개척하려고 한다.
- 미 정치권에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 소유의 전기차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인정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거대한 무역 장벽이 세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 대체에 대한 연구를 통한 기술로 방어 진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에 대한 자금은 정부가 낸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 시각)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인 SK실트론이 미국 공장 확장에 이 대출을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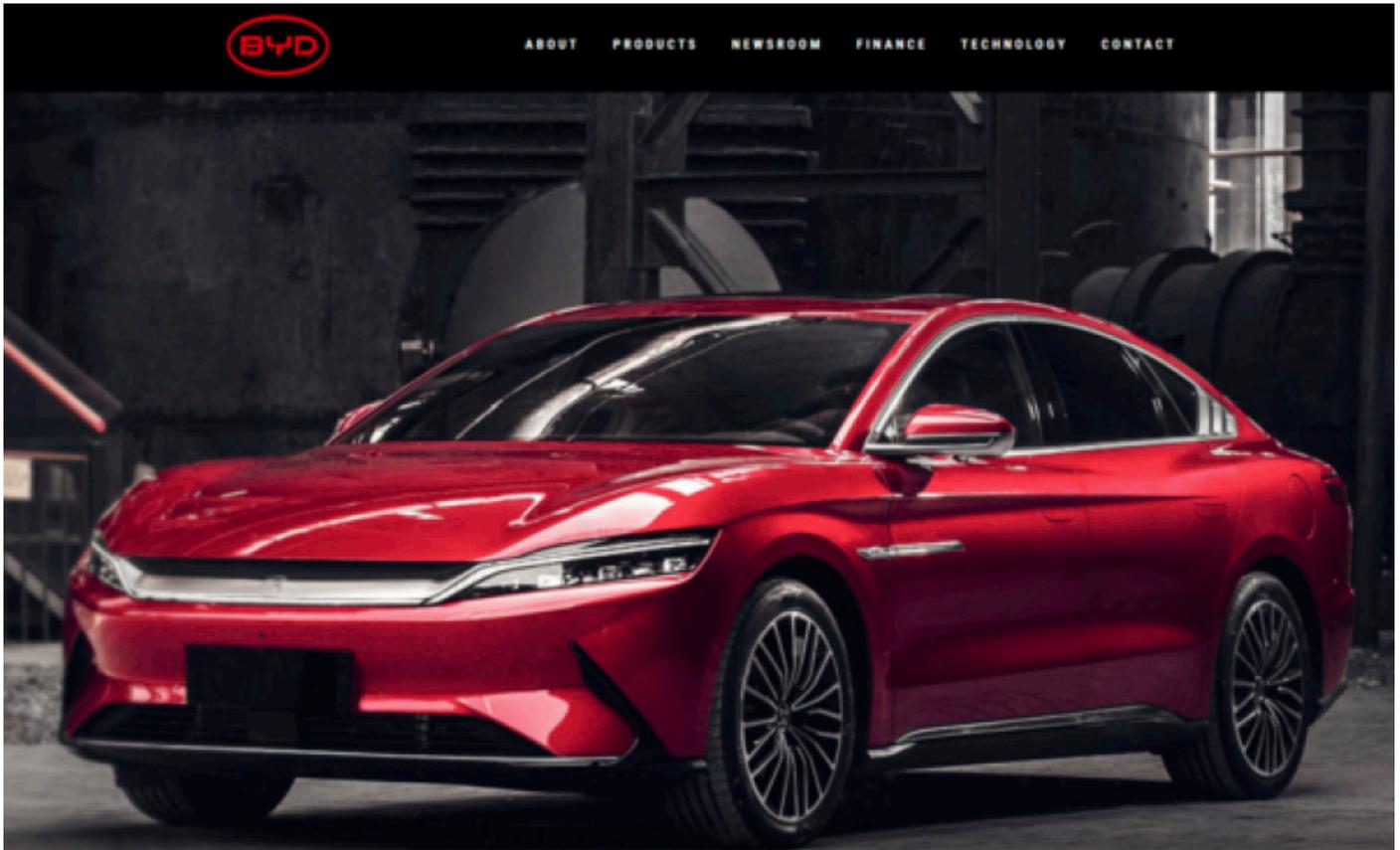
### 미국, 中 전기차 공포에 제재 강화...멕시코서 규제 우회하는 중국

최근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중단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연기하는 등 전기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데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와 배터리 제조사 CATL](#)은 올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국제조연합(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은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권력과 자금 지원을 받아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결국 미국 자동차 부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에게 중국 차량에 대한 [27.5% 관세 인상을 촉구](#)하고, 캐서린 타이의 사무실은 “다른 무역 파트너로부터 수출될 다가오는 중국 차량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다른 수출길을 알아보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BYD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도 최대치(7500달러)로 받고 물류비용도 아끼고 전기차 가격 경쟁력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려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으려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26일\(현지 시각\) 나왔다](#).



중국의 BYD가 멕시코에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싸게 들여가면,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도 새롭게 열린 수출길을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BYD 홈페이지

멕시코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무역협정인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를 체결했고 2020년 7월 발효됐다. USMCA에 멕시코도 포함됐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무관세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멕시코의 낮은 임금 때문에 BYD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 미국에 팔 경우 미국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가 차 내에서 다른 장비와 인터넷 접속을 공유할 수 있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커넥티드카는 베이징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즉각적으로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이를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카가 상당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해외로의 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러몬도 장관의 위협론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아이폰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 정부가 중국인이 소유한 수억 대의 아이폰 사용을 막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초강경 조치 취할 수 있어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멕시코에서 생산될 중국 소유 회사의 전기차에 특별 부과금을 매기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기차뿐 아니라 포드, GM, 메르세데스 등이 모두 미국 판매용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기에 한 국가의 기업만 IRA 혜택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선 출마 자격을 확보하면서 중국 제재 조치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멕시코에 큰 공장을 짓고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선거캠프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3조 달러(약 4000조원)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 부과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이런 정책 방침에 따라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이 선진 기술로 전기차 시장 방어...뒷배경에는 든든한 정부 지원

미국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에 대응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높은 기술력을 품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는 미국의 스타트업 24M이 상당 부분 완성한 1609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 괴물 전기차 배터리를 소개했다. 기존 전기차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괴물 배터리는 이미 시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했으며, 전기차 제조사의 실제 테스트만 남았다고 한다. 이 배터리는 단순히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 이외에도 충전소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게임체인저'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원료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소개된 전기차 배터리 연구 중에는 마그네슘과 나트륨으로 중국이 장악한 리튬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나트륨은 매우 저렴한 원료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물론 전기차 가격까지 낮출 잠재력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저명한 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슨(Christopher Johnson)은 최근 "우리 추정치에 따르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비용이 3분의 1정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마그네슘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보다 안전하며 수명 주기상으로도 우수하다고 한다.

이런 연구 개발이 가능한 배경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 (현지 시각) 전기차 기술제조 벤처에 대한 약 7억1000만 달러(약 9460억원) 대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 조달 능력이 2218억 달러(약 295조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 기업 SK 실트론(Siltron) CSS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효율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licon carbide wafer)를 생산하는 미시간주 베이시티(Bay City)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5억4400만 달러(약 7248억원)를 대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실트론은 성명서에서 공장 확장으로 건설 및 생산 부문에서 각각 약 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픽업 전기차 사이버트럭./홈페이지

### Editor's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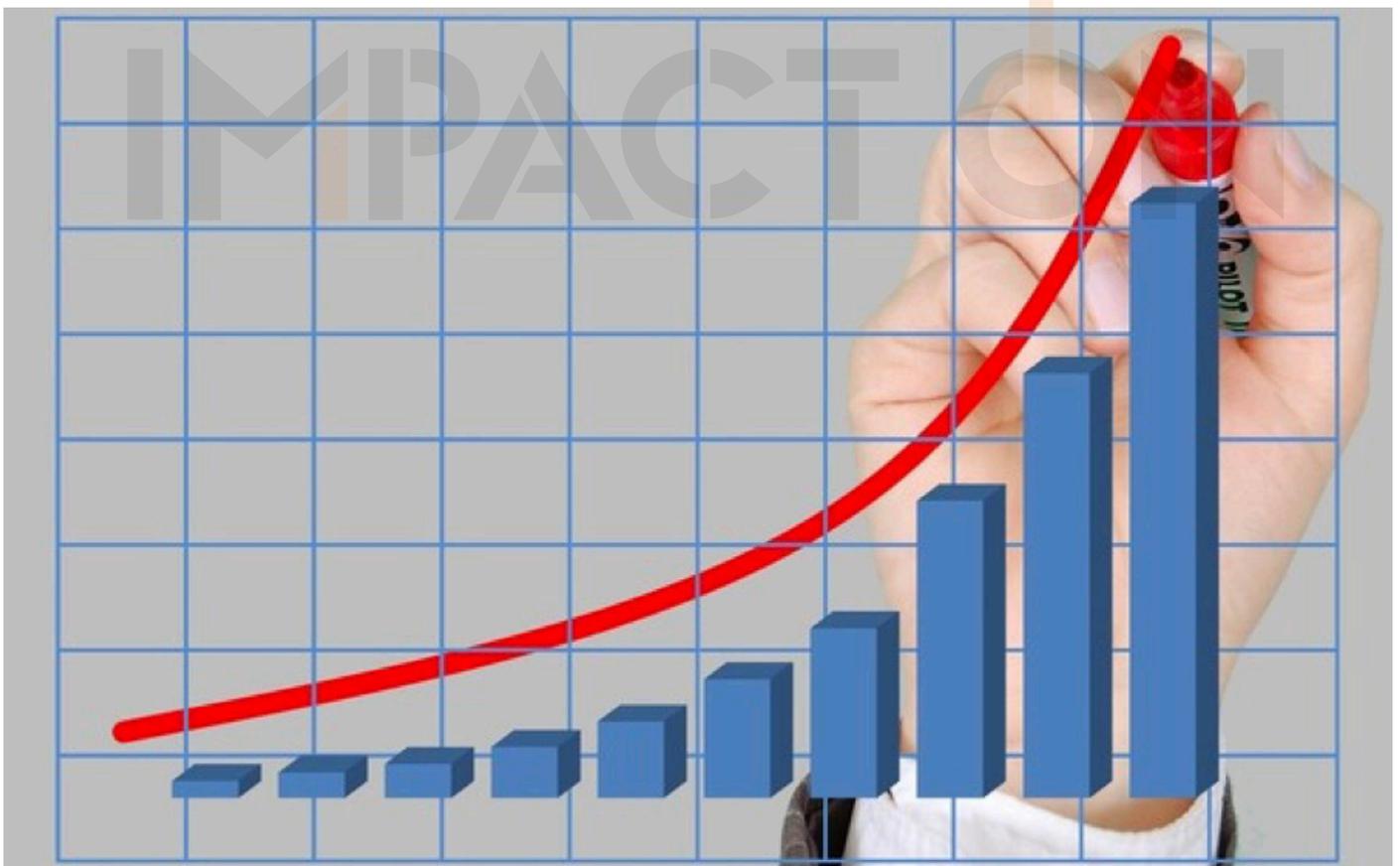
중국의 전기차 시장 독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시장점유율이 2년 연속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에 밀렸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합산 점유율이 23.1%이었다. 중국 단일 기업 중 CATL의 시장 점유율이 36.8%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독점을 바탕으로 가격 인하를 경쟁 전략으로 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경쟁국은 기술 연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고 대체 소재 연구로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 4. ESG 투자

### Key Takeaways

- 지난달 ESG 투자 부문은 지난해 침체된 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의 탄소 시장 재개 등 투자 상품도 다양해졌고 특히 채권 시장은 지난 1월 2007년 시장 출범 이후 최고 발행량을 기록했다.
- 금융 부문 규제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EU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가 2년 연기되는 등 기업에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 ESG 투자가 본격 주류로 떠오르면서, 백래시(backlash)도 거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석유 메이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엑손 모빌은 행동주의 투자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2월 아카이빙 투자 부문

## ESG 투자, 회복세 완연... 금융상품 다각화 흐름

### ① 글로벌 ESG 채권 판매액 사상 최대치 기록... 2007년 녹색채권 시작 이래 최고

2024년 첫달, [글로벌 ESG 채권 판매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월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지난 1월 전 세계 ESG 판매액이 1495억달러(약 199조원)에 달했다며, 이는 2007년 녹색채권 시장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보도했다. 주요 동인은 차입 비용 하락과 투자자 수요 증대다.

발행을 견인한 것은 정부와 개발은행이다. 최다 발행 주체 프랑스는 80억유로(약 11조원)의 녹색채권을 판매했다. 세계은행그룹, 유럽투자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기후 대응 프로젝트를 향한 각국 정부들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 ② 골드만삭스, 글로벌 녹색채권 ETF, 영국 그레삼하우스는 생물다양성 펀드 출시

이러한 바람을 타고 ESG 투자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다. 2월 15일(현지 시각)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녹색채권\(green bonds\) UCITS ETF를 출시](#)했다. 이번 ETF는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맞춤형 지수를 추종하는 업계 최초 상품 중 하나로,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9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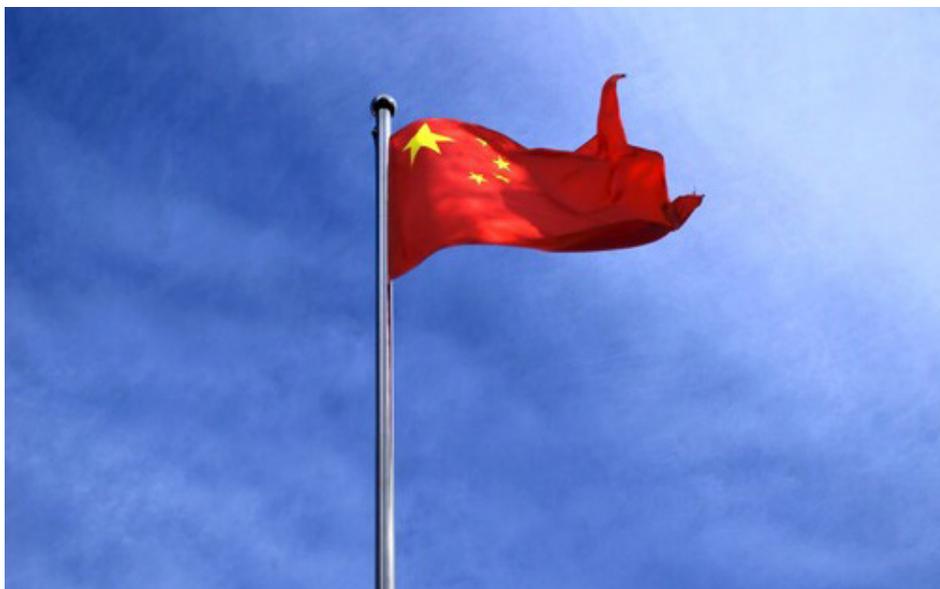
SFDR 제9조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거나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펀드를 정의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도 2월 8일\(현지시각\) ESG 통화 국채 지수 펀드\(ESG Hard Currency Government Bond Index Fund\)를 출시](#)했다. 해당 펀드는 ESG 점수 및 심사방법론을 적용해, ESG 기준과 녹색채권 발행 부문에서 순위가 높은 발행사에 투자 비중을 늘리고, 낮은 발행사는 축소 및 제외하는 JP모건의 글로벌 다각화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신규 펀드가 SFDR 제8조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SFDR 제8조는 제9조보다는 약하지만, 기업의 환경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60억파운드(약 10조)를 운용하는 영국 지속가능 자산운용사 그레삼 하우스 또한 생물다양성 펀드를 출시, 3억8000만달러(약 5049억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기업의 생물다양성 개선과 직접적인 수익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 창출은 생물다양성 크레딧 판매에서 나온다.

### ③ 중국 자발적 탄소시장 CCER 거래, 전국 재개

ESG 투자 다각화 흐름은 중국에서도 나타났다. 1월 22일(현지 시각) [중국의 자발적 탄소 시장인 CCER\(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가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17년 공급 과잉, 거래량 부족, 감사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중단시킨지 7년만이다. 중국 정부가 1년 이상 준비해 온 탄소 시장 재개인 만큼, 거래 및 시장 활성화에 앞으로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세청은 향후 국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기 / 픽사베이

ESG 투자 선호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 보고서](#) 따르면, 전 세계 개인 투자자의 4분의 3 이상(77%)이 재무적 수익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속가능 투자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ESG 데이터의 투명성 및 신뢰 부족, 그리고 그린워싱(greenwashing) 가능성을 꼽았다.

## 규제 구체화 단계… 그러나 도입은 ‘신중히’

투자자들의 우려에 따라 글로벌 규제당국들도 그린워싱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면서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신경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

### ④ ESMA, ESG 평가등급 제공업체 규제 승인 및 감독

2월 5일(현지 시각)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SG 평가기관 규제에 합의했다. [규제안에 따라 ESG 등급 제공업체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닝스타, 무디스, S&P 글로벌,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MSCI) 등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ESG 평가 시장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첫 3년 동안 중소기업은 가벼운 규정만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SMA 또한 2월 13일(현지시각) 각국 규제 당국에 서한을 발송, 2024년까지 거래 장소 및 체결 품질에 대한 상세한 연례 보고서 발행을 요구하는 [RTS 28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를 유예](#)했다.

RTS 28는 MiFID II(2차 EU 금융시장 거래소 지침)의 일부인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규제 기술 표준)으로 기업들이 거래 장소 및 체결 품질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 ⑤ 금융 부문 그린워싱 규제도 엄격해질 듯

금융 부문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ESMA는 2월 1일\(현지 시각\) 보고서를 발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팩트 펀드가 비(非) 임팩트 펀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투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보고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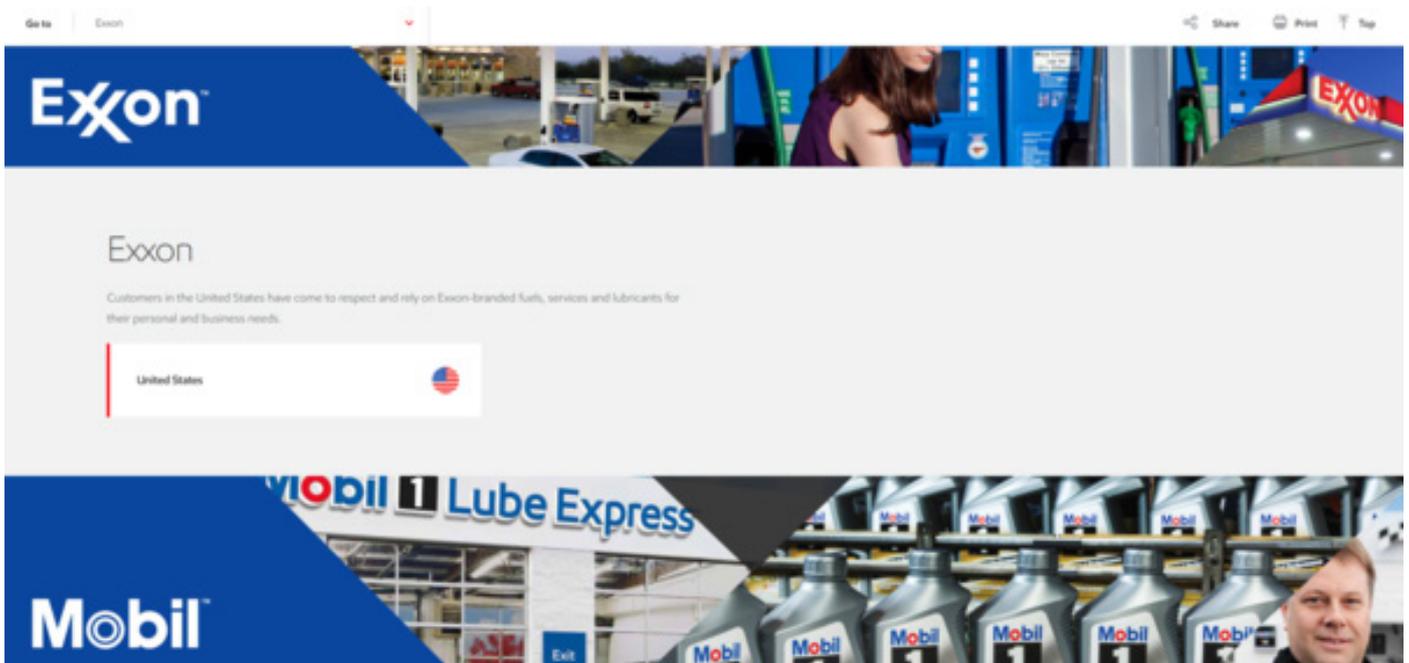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또한 1월 6일\(현지 시각\) 그린워싱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선언, ‘넷제로’ 혹은 ‘탄소 중립’을 주장하는 금융 상품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밝혔다.

## 미 대선 앞두고 ESG 백래시 거세… 기관투자자와 석유 메이저 격돌

시장이 커지고 규제가 도입되는 등 ESG 투자도 점차 주류로 편입되면서, 안티 ESG 세력의 반발도 거셌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석유 메이저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 ⑥ 엑손 모빌, 행동주의 투자자 고소 vs. 글로벌 기관투자자 엑손모빌 비판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중 하나인 [엑손 모빌이 행동주의 투자자를 고소](#)한 것이다. 기후운동단체 팔로우 디스(Follow This)와 아르주나 캐피탈이 엑손 모빌의 기후 목표에 (Arjuna Capital)이 스코프3(Scope 3, 밸류체인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시키는 주주 제안을 요구했다는 이유다. 아르주나 캐피탈과 팔로우 디스가 주주 결의안 상정을 포기했다고 밝혔음에도 엑손 모빌은 물러나지 않았다.



엑손모빌 홈페이지

엑손 모빌은 소송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기후 결의안을 주주 투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적 승인, 변호사 수입료와 소송 비용, 정당하고 적절한 법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글로벌 큰손들도 맞서고 나섰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엑손 모빌의 이번 조치가 “매우 공격적이며 주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고 4조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 연합 '기업의 책임에 따른 종교 간 센터(ICCR,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또한 “엑손 모빌이 배출량 저감 방법을 고심하기 보다는 투자자들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미국 재계의 반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ESG 투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오는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ESG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⑦ 블랙록, 개인투자자 의결권 행사 선택권 부여 프로그램 확장

화석연료 업계의 반발이 기관투자자들의 ESG 투자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악사\(AXA\)](#)는 2월 15일(현지 시각)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 및 의결권 정책을 발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는 더욱 엄격한 ESG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비 활동 공개를 통해 앞에서는 기후 목표를 약속해 투자를 받고 뒤로는 정치권에 줄을 대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나, 이러한 투표권을 소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블랙록은 대리 투표 기능을 지닌 '보팅 초이스\(Voting Choice\)' 프로그램을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뱅가드 또한 지난 12월 파일럿 테스트를 종료, 2024년 초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선택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또한 2024년 말까지 대리 투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Editor's Comment

ESG 투자는 2023년 건전한 조정을 거쳐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상품군의 출시, 시장 확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적절하고 정교한 규제 도입 등이 관찰되고 있다. 시장이 성숙한 만큼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에 정치권과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 5. 기후테크

### Key Takea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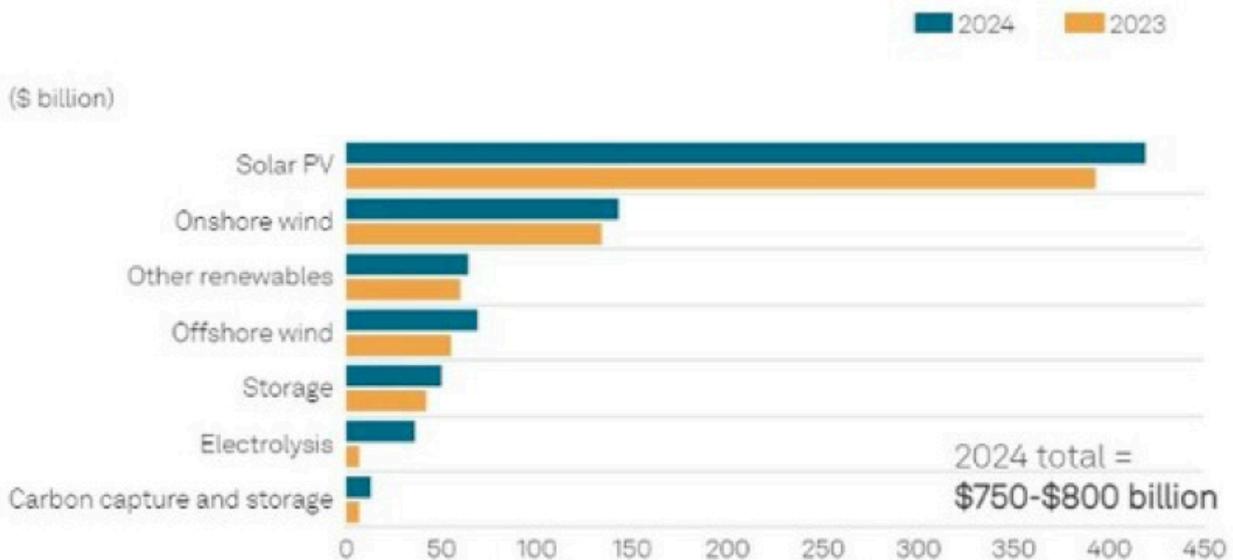
- 최근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에 따라 기업들도 그린수소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 지난 2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후테크 분야는 배터리 순환경제다. 전기차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핵심 원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재활용 업체와 협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올해 기후테크 투자 1000조원 이상 이를 것... 투자 가능성 높은 분야는?

최근 ESG 투자 위축, 전기차 수요감소, 국제정치 및 무역 불확실성 등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후테크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투자가 전년 대비 10~20% 증가해 약 8000억 달러(약 1066조원)에 이를 것이며, 2030년에는 1조 달러(약 13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은 큰 투자 규모를 가졌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더딘 반면, 배터리 에너지 저장과 전기분해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 Annual investment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Source: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청정기술 투자 규모/S&P

특히 지난 2월에는 녹색 수소에 대한 투자 증가가 돋보였다.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 국가 보조금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운송 부문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운송 · 수송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을 매년 3%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정부들은 작년 말부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기존 디젤이나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인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7개의 수소허브를 선정**하고 70억 달러(약 9조 3345억 원)를 투자해 약 150개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한 그린수소에 한해 수소 1kg당 0.60달러(800원)에서 3달러(3900원)까지 수소 생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도 그린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그린 수소를 1000만 톤 생산**하겠다는 EU 목표에 따라 유럽 7개국에 33개의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수소 저장 시설 개발, 액체 수소 운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그리고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전기분해·탄소포집 등 저탄소 수소 생산 등이 포함된다.

영국 정부도 기존 수소 목표를 2배 확대해 **2030년까지 10GW의 저탄소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영국은 향후 15년간 11개의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20억 파운드(약 3조 3000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영국 교통부(DfT)는 영국 최초의 수소 운송 허브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연료 유통업체 엑솔럼(Exolum)에 700만 파운드(약 118억 8145만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스페인은 2030년까지 연간 약 25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가스 그리드 운영업체인 에나가스(Gas Natural)와 그린 수소 생산을 확대하고 수소 인프라 네트워크를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변환 정책(Power-to-X)을 통해 수소 클러스터와 저장설비를 개발하며, 독일 경제부는 수소 프로젝트 24건에 약 46억 유로(약 6조 6715억 원)의 정부 자금을 승인해 그린 수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까다로운 산업도 그린 수소로 가능해

항공, 제조, 에너지 등 글로벌 기업들도 그린 수소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 무역회사 아라 인터내셔널은 무탄소 태양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친환경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미국 에너지 스타트업 트리 에너지 솔루션(Tree Energy Solution)은 포집된 탄소를 저탄소 메탄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버스(Airbus)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공항에 수소 항공기의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바덴 폴,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SAS 등과 협력을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 저장 회사인 에너지 볼트(Energy Vault)는 미 최대 그린 수소 에너지 저장 시설을 2024년 2분기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소방서, 경찰서 등 중요 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최대 48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볼트는 "미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미쓰비시와 네덜란드 기업 에네코는 연 8만 톤 규모로 그린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미쓰비시

아시아 기업들의 행보도 돋보인다.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 Corporation\)](#)와 네덜란드 기업 에네코(Eneco)는 합작 투자사인 에네코 다이아몬드 하이드로젠(Eneco Diamond Hydrogen)을 설립해 연 8만 톤 규모로 그린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29년 가동할 예정이며 미쓰비시는 1000억엔(약 9102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국내에서는 SK E&S가 미국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협력해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할 예정이다. 기가팩토리는 차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플러그 파워는 이 외에도 월마트, 홈디포, 아마존과 같은 거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해조 시스템 및 재료 처리 솔루션을 확대해 작년 8억9100만 달러(약 1조 18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한국석유공사도 말레이시아 SEDC 에너지와 900MW 규모의 수력기반 재생 전력을 공급하는 그린수소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했다. 일본 이네오스(Eneos)와 스미토모(Sumitomo Corp)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3.5기가와트 규모의 사라왁(Sarawak) 수력 발전을 활용해 연간 약 9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소비를 위해서 추가로 2000톤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그린 수소 생산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걸까. 그린 수소는 전기차, 대형 트럭과 화물장비 등 중장비 운송에 필요한 청정 원료일 뿐 아니라 항만 운영, 열병합 발전, 정유·석유·화학 등 제조와 산업공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화가 어려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 그린수소를 통해 탈탄소화가 가능해 여러 산업에 걸친 핵심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 그린수소 상용화 높일 수 있는 신소재 촉매제도 개발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수소를 말한다. 이 외에도 탄소포집, 바이오매스, 농업 비료 등 다양한 친환경 방식으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기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전해조 공정기술이 일반적이다. 전기분해(전해조) 공정은 물과 수소를 분리하고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 이동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근 전해조 공정 효율을 높여 탄소 감축량은 늘리고 그린수소 가격은 낮추는 새로운 촉매제가 소개됐다.

녹색혁신 기술 중 하나로 소개된 영국 스타트업 [니움\(Nium\)](#)은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나노촉매를 개발했다. 전통적인 공정 방식에 비해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암모니아로 변환할 수 있다. 수소를 공기 중 수소와 질소로 구성된 암모니아로 바꾸면 물에

비해 수소 저장과 이동이 훨씬 쉽다는 이점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신소재로 알려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도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촉매재로 주목 받았다.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는 고체산화물 전기분해 시스템에서 그린수소 생성 속도를 2배 이상 늘리고 650도에서 400시간 이상 분해 없이 작동하는 나노촉매제다. 그린수소를 효율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국 풍력 터빈 및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사 **엔비전 에너지(Envision Energy)**는 최첨단 촉매 기술 공급업체인 바스프 프로세스 카탈리스트(BASF Process Catalyst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바스프 촉매 기술을 활용해 녹색 수소와 이산화탄소에서 파생된 e-메탄올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 폐배터리 재활용, 2040년까지 큰 '먹거리' 될 수도

지난 2월에 크게 주목받았던 또 다른 기후 테크 분야는 '배터리 순환경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2030년 424억 달러(약 56조 5404억원), 2040년 2089억 달러(약 263조원)에 달해 연평균 17% 성장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의무화도 중요한 흐름이다. 미국은 IRA법 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북미에서 재가공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EU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통해 2030년부터 생산되는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산업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 **어센드 엘리먼트스(Ascend Elements)**가 투자자들로부터 1억6200만 달러(약 2158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다. 블랙록과 싱가포르 국영투자사 테마섹(Temasek) 등으로 구성된 탈탄소화 파트너스에 5억4200만 달러(약 7221억원)의 시리즈D 투자 유치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거대 투자를 받은 것이다.

어센드 엘리먼트스는 폐배터리를 수거한 후 안전하게 파쇄하고 희유금속이 들어있는 블랙매스로 분쇄하는 전처리 공정을 활용한다. 어센드 엘리먼트스의 자체 기술은 기존 광물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이 50% 적은 편이며, 지난해 9월 SK에코플랜트와 협력해 미국 내 전처리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영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에코바트(Ecobat)와 전기차 리튬 이온 폐배터리 수집/재활용하는 계약을 연장했다/에코바트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 전문업체와의 협력하는 소식은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전해졌다. 폭스바겐 그룹은 영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 [에코바트\(Ecobat\)](#)와 전기차 리튬 이온 폐배터리 수집/재활용하는 계약을 연장했으며, 1500만 파운드(약 254 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영국에 신규 재활용 공장 설립 예정이다.

[닛산과 알틸리움](#)은 녹색 가공 기술을 통해 EV 중고 배터리의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고 차세대 EV 배터리의 테스트를 위한 고니켈 화학 음극 활물질(CAM)을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모델을 개발한다. 이탈리아 트럭 및 버스 제조업체인 [이베코 그룹](#)도 독일 화학 그룹 바스프와 EV 배터리 전체 재활용 과정을 통해 유럽 현지 배터리 업계에 재활용 금속을 공급할 예정이다.

파나소닉 그룹사인 파나소닉 에너지 주식회사는 북미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 배터리 소재 및 기술 기업인 노보닉스와 중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파나소닉 에너지는 2025년부터 노보닉스의 북미 사업장에서 1만 톤의 합성흑연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노보닉스의 흑연은 최초로 약 3일 만에 합성흑연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료다.

### Editor's Comment

그린수소와 배터리 재활용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한다.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넷제로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배터리 순환경제에 집중하는 행보는 2050년까지 기업들이 넷제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배터리 순환 경제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중대 과제를 시사한다.

전기차 핵심 원료들은 인도네시아, 호주 등 소수 국가에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무역, 기후변화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배터리 순환 시스템에서 상류(광물 추출) 혹은 중류(배터리 셀로 재료를 정제) 단계가 중단되면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이 중단되는 엄청난 리스크에 당면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 넷제로 목표를 2050년까지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배터리 광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월간 ESG 트렌드 리포트 - 2월호

## 6. 이달의 핫이슈

### Key Takeaways

- SK배터리 아메리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서 사업 중인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집단소송 혹은 벌금, 노조 리스크에 처한 사건이 나오고 있다.
- 퍼스트에너지는 석탄발전소의 교체시기로 인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포기한다고 밝혀, 넷제로 중간 목표에 대한 포기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 강력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은 농민 반발을 포함, 사회적 불안이 이곳저곳에서 촉발되고 있다.

### 대미 통상무역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리스크 커지나

국내 수출대기업의 2024년 대외 리스크 점검 1순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으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해 6월에 쓴 책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가 아직 원서 번역도 안 됐음에도 국내 서점가에서 속속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트럼프 2기 재집권 현실화 시나리오 때문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관세나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기업들이 앞다퉀 미국 워싱턴에 사무실을 설립하거나 대외무역통상을 강화하는 흐름에 대해 닛케이가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반도체 장비생산업체인 도쿄일렉트론,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소니, 산토리 등이 미 워싱턴에 사무실을 열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에서 지난해 8월 신설한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사업부로 격상하고, 2월말 우정엽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 정부 초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김일범 부사장, 전 주미대사인 성 김 고문, 청와대 외신대변인 출신의 김동조 상무 등 최근 2~3년 사이 현대차는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수출대기업의 2024년 대외 리스크 점검 1순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일 것이다. 사진은 미 백악관 모습.

그 이유는 바로, 해외 사업장의 다양한 규제 리스크가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SK온의 미국 현지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국(OSHA)으로부터 7만5449달러(약 1억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월 로이터가 보도했다.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6건의 중대 위반사항, 1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는데, 이유는 공장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니켈과 기타 금속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건은 이미 몇달 전인 지난해 10월 제너럴모터스(GM)과 LG엔솔의 합작회사인 ‘얼티엄 셀즈(Ultium Cells)’에서 벌어졌다. 오하이오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27만달러(약 3조6000만원)를 부과받은 것이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안전 및 비상대응 절차 교육 미실시, 개인보호장비 사용기준 미준수 등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2~3년 사이 국내 수출대기업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로이터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협력업체의 아동노동 법규 위반 의혹을 파헤친 공로로, ‘조지 폴크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2022년 7월부터 앨라배마주 경찰 및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 전현직 직원들을 인터뷰, 10대 미성년자가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불법으로 일했음을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8개월 가량 보도와 정부 규제, 조사 등이 이어졌으며, [현대차는 결국 72% 지분을 보유했던 자회사 2곳의 지분을 매각했다](#). 향후 로이터 통신은 국내 기업의 비슷한 사항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현대차 미국공장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30%를 넘어섰다고 전미자동차노조\(UAW\)가 2월 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전미자동차노조의 확대 전략과 일치하는데, 최근 “2026년까지 미국 내 비노조 자동차 및 EV 배터리공장 노동자 조직에 4000만달러(약 53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내연기관차 3사와 함께 유례없는 파업을 벌여 성공한 UAW는 내연기관차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까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며, 최근 테슬라, 도요타, 혼다, 현대차 등 14곳 비노조 자동차 노조원이 가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업전환기에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까지 조직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UAW의 전략이 불안정한 일자리 및 고용 재조정에 놓인 자동차 노조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향후 노조 리스크 대응이 중요해질 이슈일 수밖에 없다.

## 글로벌 기업 넷제로 중간목표 포기 선언 이어지나?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던 뉴스인데, [미국 퍼스트에너지\(First Energy\)](#)는 “[석탄 발전소를 제때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2월 10일(현지시각) 밝혔다. 퍼스트에너지는 미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1997년 설립된 전력회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전력회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압력에 대응해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퍼스트에너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세웠으나, 문제는 2030년 중간목표였다. 브라이언 티어니(Brian Tierney) 퍼스트에너지 CEO는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자원 적정성 문제를 포함해,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도전과제를 발견했다”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에 있는 프트마틴 & 해리슨 석탄발전소가 2035년과 2030년에 폐쇄될 예정이기에 2030년까지의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즉 두 곳의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은 퍼스트에너지 한 곳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미 유틸리티기업인 [듀크에너지\(Duke Energy\)](#)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규제 당국에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탄소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데 2030년 시한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이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이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것과도 일치한다.



넷제로 목표를 조정하거나 이행시기를 뒤로 늦추는 기업도 생겨났다. 아마존의 경우, 지난해 5월 “2030년까지 전체 출하량의 50%에 대해 탄소중립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고, 2040년까지 목표를 조용히 연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이 지난해 8월 SBTi(과학기술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120여곳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언론에서는 [아마존의 조용한 넷제로 목표 후퇴를 비판하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정반대의 흐름도 있다. [독일의 보험사 알리안츠그룹은 기업의 넷제로 현황과 전환 경로를 추적하는 디지털 대시보드를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넷제로 추적도구인 ‘SAMEpath’는 지역별 지도를 통해 여러 국가의 넷제로 현황 및 경로를 비교해볼 수 있다.

[넷제로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도 등장했다](#). 영국 기후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이 발표한 ‘넷제로 그린워싱’에 관한 보고서다. 포춘 2000대 기업 중 293곳에 대한 넷제로 성과를 트래킹한 것으로, 이들 기업 중에서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한 곳은 총 15곳뿐이었다.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한 곳은 총 15곳. 여기에는 애플, 이베르드롤라, 에넬, 오스테드, 소프트뱅크 그룹, 제너럴 밀스, 다농, H&M,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 포함됐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부합’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됐으며, LG화학이 C+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포스코(D+), 현대차(D+), 롯데화학(D+), 한전(D+), 현대제철(D+), 삼성물산(D), SK하이닉스(D+), (주)SK(D) 등의 평가를 받았다.

## 탄소 규제 맞선 농민들, 화석연료 보조금 항의하는 기후단체...글로벌, 기후 이슈로 몸살

기후 이슈는 2월 미국과 유럽연합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농업부문 탄소배출 감축 규제에 맞선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로 도로 곳곳이 점거되고, 반면 한쪽에선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에 항의하는 기후 환경단체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 EU backs down on agricultural emissions after farmers' protests

Reference to a 30% cut in nitrogen and methane gases by 2040 removed from proposed road map



Farmers protest on Luxembourg Square in fro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as EU leaders gathered for a summit in Brussels last week © Dirk Waern/Belga/dpa

파이낸셜타임즈에 등장한 농민시위 모습/ FT 화면 캡처

FT, 블룸버그를 비롯해 외신에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 EU 도심을 가득채우거나 화염병에 불탄 시위장면 등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6일 발표한 EU 집행위원회의 2040 기후 중간목표 선언에서,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할 것을 권고했는데, 당초 목표에서 농업 분야의 이행 목표가 빠졌다.

하지만 아직 국지전은 계속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덴마크는 국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부에게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 자문단이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톤당 최대 750크로네(109달러, 약 14만원)만큼의 탄소세를 농산물에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농업 부문 배출량이 가장 큰 나라 중 한 곳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출량 감소가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240~320만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6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반대 현상도 나타난다. 네덜란드에서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항의하는 환경단체가 의회 및 정부 부처에 가까운 헤이그 주변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시위에 가담한 1000여명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환경단체는 가장 강력한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이다. 이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회는 2022년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관련 정책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 Editor's Comment

우리말로는 모두 리스크로 쓰이지만, 사실 리스크는 ‘해저드(Hazard, 일정 수준의 위협적인 상황으로, 대처에 따라 잠복하거나 소멸)’, ‘리스크(Risk,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서, 해저드와 개연성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리스크로 발전)’, ‘재난(Crisis,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정세의 급변이나 중대단계)’ 등으로 나뉜다.

현지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벌금 사건 또한 몇 달 전 발생한 얼티엄 셀즈의 사건 후속조치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정부당국의 대처를 모니터링, 미리 예방하는 사전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다.

넷제로 중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가 등장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의 향후 대처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기후로 어수선한 글로벌의 모습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시가 갖고 올 산업지형의 변화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기후 실업이라는 용어가 뉴스에 나타날 지도 모를 일이다. 산업 전환 못지 않게, ‘인력 전환’ ‘일자리 전환’ 등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IMPACT ON